

법령 I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기본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안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② 집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④ 실시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㉠ ~ ㉣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행정안전부장관은 (㉠)을/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한다.
- (㉡)은/는 5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(㉢)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(㉣)은/는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| ㉠ | ㉡ | ㉢ | ㉣ |
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① 국무총리 | 국무총리 | 대통령 | 행정안전부장관 |
| ② 국무총리 |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행정안전부장관 |
| ③ 대통령 |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국무총리 |
| ④ 대통령 | 국무총리 | 대통령 | 국무총리 |

문 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·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- ②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
- ③ 「전파법」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- ④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

문 4. 다음 사례에서 ㉠ ~ ㉣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2020. 11. 1. A 특별시에 적이 침투·도발하여 단기간 내에는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·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하였다. A 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A 특별시장 甲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고, 2020. 11. 3. 甲은 A 특별시에 을종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. 이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해당 사태가 B 광역시까지 확대되자, ㉠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하였다. 이에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협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. 11. 6. A 특별시와 B 광역시에 을종사태의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다.

소관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甲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라 판단하여,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 乙과 중점관리대상물자(의약품 및 의료기기)의 소유자인 丙에게 2020. 11. 10. 각각 협력을 요청하였다. ㉡ 乙에게는 구두로 참여 협력을 요청하였으며, ㉢ 丙에게는 문서로 사용 협력을 요청하였다. 이들에게는 지정 당시 이미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둔 상태이다.

2020. 11. 20. 정상상태로 회복됨에 따라 국회는 통합방위사태의 해제를 요구하였고, 같은 날 대통령은 그 통합방위사태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다. ㉣ 甲은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,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丙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을 2020. 11. 29.까지 연장하였다.

① ㉠, ㉡

② ㉡, ㉢

③ ㉡, ㉣

④ ㉢, ㉣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㉠ ~ ㉣에 해당하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(㉠)은/는 주무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.
-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(㉡)이/가 그 훈련의 방법·기간 등에 대하여 (㉢)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.
- (㉣)은/는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.

- ① ㉠은/는 5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㉡은/는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·인수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㉢은/는 정부연습의 실시에 관한 승인권을 갖는다.
- ④ ㉣은/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.

문 6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다른 훈련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훈련은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「병역법」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에 우선한다.
- ②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.
- ③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인력자원에 대한 훈련은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훈련에 우선한다.
- ④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「예비군법」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.

문 7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와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훈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
- ㄴ.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의 기간은 연(年) 7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ㄷ.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나,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.
- ㄹ.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및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8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」상 정부연습 및 자체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방법은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으로 구분되며,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
- ② 주무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책임하에 해당 기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·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지역별 또는 부문별 자체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의 방법·기간 등을 정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.
- ④ 정부는 전시대비계획을 검토·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 행정기관의 상호 연계하에 정부연습을 실시하되, 군사연습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
문 9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인력인 甲은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보상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甲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,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본다.
- ②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甲이 의료지원을 받게 하여야 하며, 이때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甲이 완치 후 퇴원 수속 중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, 그 유족은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재해보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한다.
- ④ 甲은 훈련기간이 1일을 초과하고 동시관리훈련이 아닌 훈련에 참가한 경우에 식비·숙박료·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다.

문 10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 국방부장관은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-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보상금 지급 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·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주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문 11.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상 甲 ~ 丁에게 해당하는 법정형을 중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-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였던 甲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-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乙이 출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사용자 丙이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- 훈련대상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아 전달할 의무가 있는 丁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

- ① 甲 > 乙 = 丁 > 丙
- ② 乙 = 丙 > 甲 > 丁
- ③ 甲 > 乙 = 丙 > 丁
- ④ 丁 > 乙 > 甲 > 丙

문 1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·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소관 주무부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을 지정한다.
- ③ 주무부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,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.
- ④ 주무부장은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할 때에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문 1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등은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감모(減耗)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주무부장관이 정부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, 규격, 수량 및 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,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- ④ 비축물자의 품목·규격·수량·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.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ㄴ.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기본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협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ㄷ.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ㄹ. 시·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·도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,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·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·장비 또는 물자의 점검 주기·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동행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
문 16.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
29세 여성 甲은 2013. 3. 2. A 산업대학에 입학하였고, 2020. 12. 19. 현재 B 리(里)에 주소를 두고 있다. 甲은 지역사회에 전염병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기 위해 2020. 12. 19.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였다.

— <보 기> —

- ㄱ.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A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,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없다.
- ㄴ. B 리의 이장 乙은 甲이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건강상 이유로 더는 지역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면,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ㄷ.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주소지인 B 리에서 그 구역 외에 있는 C 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, B 리의 이장 乙의 승인을 받아야 甲은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
- | | |
|--------|-----------|
| ① ㄱ | ② ㄴ |
| ③ ㄴ, ㄷ | ④ ㄱ, ㄴ, ㄷ |

문 17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둔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.
-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둘 이상의 통·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·해체·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문 18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대의 기술 및 기능 요원은 연 10일,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, 이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ㄴ.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은 직접 교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- ㄷ. 민방위대요원에 대한 전지(轉地)교육은 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ㄹ. 교육훈련 대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19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.
- ②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③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관혼상제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동원 명령자는 직권으로 동원을 미룰 수는 없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20.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민방위 대원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과 무관하게 법정 사망 보상금 전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.
- ②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.
- ③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·숙박료·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한 민방위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재해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.

문 21.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읍·면·동장은 등화의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② 민방위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.
-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시설의 소개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등화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문 22. 甲은 A 시 B동에 소재하면서 乙을 직장의 장으로 하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원이다.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(O)과 옳지 않은 것(X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ㄱ.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 동장이 전달하며, 직접 교부하는 경우 甲이 없으면 같은 세대 안의 가족 중 성년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.
- ㄴ. 甲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, A 시장은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- ㄷ.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乙을 거쳐 A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ㄹ. 사용자 乙이 甲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.

	ㄱ	ㄴ	ㄷ	ㄹ
①	X	O	X	O
②	O	X	O	X
③	X	X	O	O
④	X	X	X	X

문 23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갑종사태, 을종사태, 병종사태의 통합방위사태
- ②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기능의 수행에 지장이 있어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사태
- ③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
- 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

예비군법(시행령 포함)

문 26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최종 선발예정일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미성년자가 예비군편입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지역예비군 편입지원서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직장예비군 편입지원서는 해당 직장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, 도중에 해당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.

문 27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이전(以前)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은 즉시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한다.
- ② 직장예비군대원이 퇴직한 경우 직장의 장은 그 퇴직 사실을 퇴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.
- ④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

문 30. 무장폭도가 A 지역에 침투하여,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A 지역의 교통 및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였다.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甲이 출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.기간.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
- ㄴ. 甲은 출입 제한 명령의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ㄷ. A 지역에 출입하는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甲은 그 사유를 버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ㄹ. A 지역을 출입하는 버스가 운행을 못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, 버스회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
문 31.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및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②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무장을 위한 무기의 유지.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경찰서장은 자신이 별도로 정한 장소에 무기를 분리.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예비군특수복 중 근무복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하기(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)와 동기(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)의 구별에 따라 구분하여 착용한다.
- ④ 예비군특수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은 육군참모총장.해군참모총장(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).공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특수군복 중 야전상의의 색상에 따른다.

문 34.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하여 ㉠ ~ ㉣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불시 훈련이 아닌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(㉠)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- 출어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의 소집통지를 받은 후 (㉡)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여야 한다.
-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경우 훈련소집일 (㉢)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예비군대원이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(㉣)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(단, 훈련소집일은 휴일이 아님).

	㉠	㉡	㉢	㉣
①	7일 전	48시간 이내	30일 전	12일 전
②	7일 전	24시간 이내	30일 전	14일 전
③	7일 전	48시간 이내	14일 전	7일 전
④	5일 전	24시간 이내	14일 전	12일 전

문 35.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방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않은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중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81명 미만인 채로 1년이 지난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분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채로 1년이 지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④ 소대로 편성된 직장예비군 소속 예비군자원이 80명을 초과하게 된 때에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.

문 36. 예비군법령상 권한의 위임.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.
- ㄴ. 국방부장관은 작전상 필요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ㄷ. 수임군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하여 경찰서장이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경우, 경찰서장은 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ㄹ. 경찰서장이 국방부장관이나 수임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 임무수행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ㄹ

문 37. 예비군법령상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.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사항이다.
- ③ 협의회의 위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협의회의 의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를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3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.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·시행하는 계획, 점검·검사, 교육·훈련,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조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직무 대행의 순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 우선한다.
- ④ 경찰청장, 소방청장, 문화재청장, 산림청장,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
문 39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준비를 하여야 한다.
- ㄴ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ㄷ. 기능연속성계획에는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,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ㄹ.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있는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(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포함)의 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문 40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국가핵심기반의 지정·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하여야 한다.

문 4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기준을 제정·운용하여야 하고, 그 기준을 제정할 때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,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,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·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문 42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.
- ③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가 발생한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재난에 해당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.

문 4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탐색구조본부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③ 재난현장에서는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되,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소방청장과 시·도지사는 긴급구조업무와 행정기관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문 4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재난의 복구비등의 선지급과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구비등을 선지급 하려는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한 피해 주민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복구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 주민의 주(主)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수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등을 지급한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복구비등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복구비등을 반환하도록 명하지 아니한다.
- ④ 반환하여야 할 복구비등의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.

문 4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안전문화의 진흥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
- ㄴ. 안전관리현장의 제정·고시
- ㄷ. 안전정보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
- ㄹ. 안전지수의 개발·조사 및 그 결과 공표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ㄱ, ㄷ, ㄹ

문 46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,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ㄴ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.
- ㄹ.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. 12. 31.인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2020. 9. 25.에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기한을 준수한 연장신청이다.

- ① ㄱ, ㄴ
- ② ㄷ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47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 1명과 50명 이상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- ② 회의는 회의를 요청한 위원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④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48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국가재정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ㄴ.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ㄹ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
문 49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·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아닌 것은?

- 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의 일시 사용
- ② 「민방위기본법」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
- ③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 부대의 지원 요청
- ④ 응급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의 위험구역 출입금지

문 50.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·분석·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제외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신이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기록하고,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단의 재난원인조사 결과를 신속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·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